

대선 투표율을 높여라...민주, 전남 3만명 거소투표 늘리기 총력

민주 도당, 지방선거 공천 연계 '책임투표소제' 구체화 9일부터 닷새간 신고...거소투표 신고율 제고 사활

여야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적게는 수만에서 수십만 표차로 승부가 갈리는 초박빙 대선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9일 시작되는 거소투표 첫 번째 승부처로 삼고 거소투표 신고율 제고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3만 표 전후로 예상되는 '덧밭' 전남지역 거소투표자 투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려 승리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전남도당은 6·1 지방선거 기초의원·광역의원·기초단체장 출마예정자별로 대선 투표소를 할당, 투표율에 따라 공천 가산

점을 부여하는 '책임투표소제'를 최근 구체화하고, 10개 지역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거소투표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독려하고 있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적으로 거소투표 신고 기간이 운영된다.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민주당은 거소투표 대상자가 전국에 걸쳐 약 100만명, 전남에는 3만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

하고 있다. 전남도도 도내 요양시설·요양병원 408곳에 입소자 2만5000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 일반병원 입원환자, 함정 근무자, 교도소 수감자 등을 합치면 전남에만 3~4만명의 거소투표 대상자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전남도당이 거소투표 등 투표율 제고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은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정당 후보에게 표가 몰린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거소투표 신고율 제고를 위해 민주당 전남도당은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공천을 심분 활용하고 있다.

우선 앞서 지난 1월 천명한 '지방선거 입후보자 대선 투표소 책임제'를 구체화했다. 기초의원·광역의원·기초단체장 등 정당 소속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에게 선거구별로 투표소를 1~3개씩 실명으로 할당

하는 작업을 최근 마무리했다. 이렇게 투표소별로 출마예정자를 분류한 뒤, 맡은 투표소 투표율이 해당 시군 투표율보다 높으면 공천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투표소별 투표율 순위를 매겨 점수를 차등화해 공천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전남도당은 도당 산하 10개 지역위원회에 '책임투표소 시행' 안내문을 보내 "당장 9일부터 거소투표자 신고가 시작된다. 각 투표소 책임자를 도당에 보고하고, 9일부터 투표율 90% 올리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승남 도당위원장은 "역대 대선에서 전남지역 투표율은 70% 중반대였다. 이번에는 10%포인트 이상 높은 90% 투표율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투

표소별 투표율 순위 등 투표소 책임제 결과를 다가가 오는 지방선거 공천 심사 단계에서 확실하게 반영해 대선 승리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거소투표 등 투표율 제고에 전력을 쏟는 것은 이번 대선 승부가 적게는 수만~수십만 표에서 갈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역대 대선 결과를 보면, 승부가 일찌감치 기운 일부를 제외하고는 1, 2위 후보 표차는 적게는 30만~100만 표였다. 박빙 선거로 꼽혔던 제16대 대선에선 이회창, 노무현 후보가 각각 1144만3297표, 1201만4277표를 얻어 표차는 57만여 표였다. 제15대 대선에선 이회창, 김대중 후보가 각각 993만5718표, 1032만6275표를 얻어 둘의 표차는 단 39만여 표에 불과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대선 D-30 제20대 대통령선거를 한달여 앞둔 6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선관위 직원이 D-30으로 안내판을 변경하고 있다.

안철수 "당선이 목표...공동정부 고려 안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6일 대선 레이스를 원주합지에 대해 "완주가 목표가 아니라 당선이 목표"라고 말했다.

후보 단일화는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야권후보 단일화 시에도 자신으로 단일화를 통한 당선이 목표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후보는 이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 "단일화는 없다고 했는데 3월 9일 투표일까지 이 점은 변함없다"라는 질문을 받고 "대선 때(투표일)가 되면 국민들께서 알아서 어느 후보가 더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고 (표를) 붙여주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여러 가지 적합도 조사도 나오고, 여당 후보에 대한 경쟁력 조사도 나오는데 많은 여론조사

가 제가 더 경쟁력 있고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어느 후보가 야권 후보로서 더 경쟁력 있는지 국민이 판단해주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일각에서 후보 단일화 조건으로 거론하는 '공동정부' 제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집권하면 '국민 통합 내각'을 구성해 "어떤 특정한 정당에서만 인재들을 등용하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를 놓고 거기에서 인재를 뽑는,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내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대선을 한달 앞두고 유권자에 호소하고 싶은 말을 묻자 "저는 진영을 보지 말고 인물을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연합뉴스

베이징 개막식 한복에...정치권 '문화침탈' 한목소리

여 "막무가내식 문화공정 유감" 야 "문체 장관 국민 자존심 없나"

5일 중국 베이징동계올림픽 개회식 행사에서 한복을 입은 여성이 '중국 소수민족'으로 표현된 것에 대해 정치권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전세계 생중계된 개회식에서 56개 민족대표 등이 참여해 중국 국기를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펼칠 때 한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지난해 베이징동계올림픽 홍보영상에서도 한복과 상모돌리기 등장해 '문화공정'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민주당 선대부 대변인을 맡은 이소영 의원은 이날 SNS에 "중국의 막무가내식 문화공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썼다. 이 의원은 "결핍하면 불

거지는 중국의 동북공정, 문화공정은 매년 해소, 해결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쌓여 왔다"면서 "우리 2030 청년들이 강한 반중 정서를 갖게 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리외교를 추구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 문화를 지키는 일도 중요하다"면서 "지금처럼 노골적으로 문화공정을 벌이는 데에 침묵할 수는 없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선후보도 페이스북에 "문화를 탐하지 말라. 문화공정 반대"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야당은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국민의힘 황규환 선대본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주권국가에 대한 명백한 '문화침탈' 이자, 함께 하는 미래라는 이번 올림픽의 슬로건을 무색하게 하는 무례한 행위"라며 "대체 대한민국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전 세계인들이 지켜보는 올림픽 개막식

에서 문화공정을 보란 듯이 펼쳐 보일 수 있는가"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전부터 한복을 '한푸(漢服)'라 칭하며 자신들의 것이라 주장했고, 아리랑을 자신의 국가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며 "지난해 베이징 올림픽 홍보영상에는 상모 돌리기와 한복을 등장시켰으니, 아제의 장면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될 수 없는 이유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문체위원회 배현진 의원은 전날 밤 SNS에서 "베이징 올림픽 준비 영상에 우리 문화를 훔쳐 소개했다고 지난해 국감에서 미리 경고했고, 분명 장관이 유의하겠다고 했는데?"라며 "국회의장, 문체부 장관 (개회식을) 직관하지 않았다. 최소한의 국민 자존심, 배알을 놓을 정도로 신나게 낚 놓는 개막식이었나"라고 쏘아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민주, '추경증액 반대' 홍남기 탄핵 거론

을지로위원회 "민생능멸"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의 증액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탄핵'을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을(乙)지기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홍 부총리의 발언을 지목, "민생을 외면하겠다는 '민생능멸' 이자 국민을 대표하는 '국민무시' 발언"이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지난해 세수 초과분이 60조원에 이른다는 점을 언급하며, "재정을 확대해야 할 국난의 시기에 긴급 재정을 도모한 기획재정부의 심각한 직무유기이며, 세수 추계의 오류를 바로잡지 않는 것은 독선과 오만"이라고 일갈했다. 의원들은 홍 부총리의 '탄핵' 가능성도 거론했다.

이동주 의원은 "현장에서는 홍 부총리를 이렇게 낚아서야 되겠느냐며 탄핵하자는 여론까지도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홍 부총리는 스스로 사과 하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원석 의원이 "쓰러지는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기재부의 국민 제일주의식 논리가 더이상 설 자리가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의원총회 소집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 설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민주당은 홍 부총리가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 위원회에 출석해 여야가 추경 증액에 합의해도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직후에도 탄핵 소추 추진 가능성을 시사하며 홍 부총리를 정조준했다.

홍 부총리는 당시 "정부가 제출한 규모 선에서 추경 논의가 되는 게 적절하다"며, 여야가 추경 증액에 합의해도 "쉽게 동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진성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을 능멸하고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무시하는 월권적 발언을 철회하기를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는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권한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상가매매(상무지구) 신축원룸매매(신축)

중심상업지역
6층, 7층 (층분양 140평)

시세 -> 9억

급매가 -> 5억8천

(보 3천, 월 350만, 용 3억5천)

(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휴,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1개동 원룸 (상가)로 노후대비골(공실없음)

- 월수익 750만
- 년수익 9000만
- 매가 13억5천
(보2천, 용 6억5)

★ 4개동(월수익 3000만) => 년수익 3억6천
매가 56억(보8천, 용25억)

010-6670-9800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신 양 용